

## 중기청장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예

단체수의계약제도 연내 완전폐지 방침을 고수해 왔던 중소기업청이 제도는 폐지하되 1~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8월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의 보호막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자는 것”이라며 “올해 법률안을 상정해 제도를 폐지하되 보완책 마련을 위해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유예 방침을 밝히자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유예를 반대해 왔다. 김 청장은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각종 보완시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품목별 유예기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999년에도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이 마련됐다가 2년 만에 무산됐던 점에 비춰 볼 때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대상 무료 사이버 방역 서비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무료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전용백신 및 보안 패치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방역서비스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정보보호 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자금여력이 없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9월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하여야 하고,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네트워크시스템 기반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780여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하는 두레포탈시스템을 구축, 지난 8월6일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앙회 김용구 회장, 삼성SDS(주) 김인 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올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7월 구축을 완료하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을 시작한 인터넷포탈시스템인 두레포탈은 그 동안 중앙회와 협동조합간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고, 지식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사이버 워킹센터를 구현한 것이다.

## PL사고 급증 ... 대응은 '미미'

PL(제조물책임)관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나 기업의 대응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PL보험에 대한 정부정책마저 소비자 위주로 돼 있어 PL보험의 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PL단체보험 사고접수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사고접수 건수는 총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0건에 비해 32% 증

가했으며 지난 2002년 한해 (117건)에 비해서는 무려 6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평균 보험료지급액도 2002년 700만원, 2003년 600만원, 올 상반기 850만원 등으로 높아져 배상규모도 지난해에는 12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전날로 만료됐으나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내야할 세금의 1만분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중소 대기업 납품주문서로 대출

중소기업들이 다음달부터 대기업 등 우량기업의 납품주문서만 있으면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납품 주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Network Loan)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우량 구매기업과 협약을 맺은 뒤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 주문서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생산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대출가능 금액은 납품 계약금액의 80%다. 구매기업은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납품이 끝나면 결제대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로 전환해 납품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된다. 신보는 네트워크론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50% 범위 내에서 일반 운전자금의 보증한도인 15억 원보다 2배 많은 3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료도 신용등급별 요율에서 0.2%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 '중소 경영자문 봉사단' 발족

대기업 퇴직 경영자와 임원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도우미로 활동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봉사단'이 최근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대기업 퇴직경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문 봉사단은 대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 등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무료 컨설팅 조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획, 경영전략과 변화관리, 기술, 생산,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경영전반과 모든 업종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 경영자문 봉사단의 자문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e-메일, 전화, 우편,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대1 또는 다수 봉사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공제기금 출장소 개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그동안 지회와 거리가 멀어 공제기금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강원도 원주, 경기도 안산 및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공제사업기금 출장소를 설치하고 지난 7월22일 10시 원주출장소에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관계자 및 업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기금 원주출장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출장소는 다음과 같다. ▲원주출장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033-733-0513/4) ▲안산출장소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3층(031-492-2574/6) ▲의정부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5-1 경기도 제2청사앞(031-851-0164/5)